



이상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 수요자중심의 장애인정책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5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전 국민의 5%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1981년 정부가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한 이래, 장애인복지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각종 지표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은 여전히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이나 취업에 있어서도 일반인에 비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는 이동권, 교육권, 자립 및 차별금지 등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가치 기준도 그간의 보호와 지원에서 소비자선택과 고객만족을 보장하는 쪽으로 비중이 옮겨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올해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전반에 뿌리박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애인 정책은 보다 수요자 위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장애판정은 장애를 의학적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수요나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판정결과에 따른 복지서비스도 일률적으로 제

공될 수밖에 없었다.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등록·판정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가 의학과 사회복지계 공동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과 준비를 거쳐, 수요자형 판정시스템으로 개편되면 2010년부터는 개선된 판정체계에 의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중복이나 사각지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판정등록체계의 개편은 보다 수요자에게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

달체계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는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뿐 아니라, 장애인 또한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그 역량을 강화하고 활용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드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